



보도자료

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
〈상임위원장 우원식/공동위원장 위성곤, 여기구, 정춘숙 / 간사 양의원영〉

2023. 10. 30(월)

수신: 각 언론사 정치, 외교, 원전, 환경 담당기자(산업부, 외교부, 환경부, 과기부, 해수부 등)

문의: 우원식 의원실(서영준 선임비서관 010-6427-9787)

총 분량: 3쪽

[보도자료]

후쿠시마총괄대책위, 국감 성과보고 기자간담회 개최

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△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응, △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, △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전 세계적 환경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.

오늘 기자간담회는 양의원영 대책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, 홍익표 원내대표, 우원식 상임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. 이후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성과를 ▲외통위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, ▲환노위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, ▲문체위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, ▲농해수위 윤재갑 전남대책위원장, ▲정무위 민병덕 경기대책위원장, ▲보건복지위 김원이 연대사업본부 위원, ▲과방위 이정문 전략기획본부 위원이 차례로 발표했다. (#첨부1 참조)

대책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▲위성곤 집행위원장이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입금지 입법 추진, 전국 지방의회 방사성 급식 금지 조례제정 운동에 대해 밝혔으며, ▲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초청간담회 추진계획, ▲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향후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했다.

우원식 상임위원장은 “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폄훼하고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옹호하고 있다” 고 밝히며 “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” 며 각오를 다졌다. (끝)

#첨부1.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결과

#첨부1. 상임위원별 주요 성과

상임위	주요성과	발표
외교통일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MO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 지적(김경협, 박홍근, 이용선) - 우리 정부의 발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화한 윤석열 정부 발언 -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로 선정되고 작년 윤석열 정부도 문제제기를 한바 있었으나, 올해는 입장 변경 ○ 오염수 탄소-14, 세슘 등 검출, 알프스 성능 담보 못해(김상희) ○ 1,2차 방류후 8차례 방류허용 최저치 이상 방사능핵종 확인, 특정지역의 3중 수소 농도 지속적으로 상승, 알프스 수리하던 작업자 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비판 	이용선
환경노동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LPS 오염수외에도 방사성오염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누출 발생(우원식) ○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1년 기간만 평가해서 분석(우원식) - 장반감기핵종의장기간 축적 영향 평가 불가 ○ 사고 원전,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희석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독일 규정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는 희석 배출불가(우원식) ○ 환경부의 후쿠시마 TF 미참여 대응 질타(전용기) ○ 해수담수화 고려 도서지역 먹은물 기준 삼중수소 관리기준 필요(김영진) ○ 해수부 모니터링, 환경부 모니터링 시료측정 방식 문제(우원식) - 해수 10L, 담수 1L 채취 방식, 원자력연구원 권고량, 방사선환경영향평가기준(해수 60L, 담수 20L)보다 매우 적어 평가 정확도 떨어져 ○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무대응 환경부 질타 (이수진) ○ 국립환경과학원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및 기준 부재 문제 제기 (이수진) ○ 원전 오염수 관련 미국 EPA(환경보호국) 역할과 비교되는 우리 정부 대응 문제 (이수진) ○ 후쿠시마 원전 청소세정액 분출사고, 도쿄전력의 총체적 관리부실(우원식) 	이수진
문화체육관광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로 3개월 간 약 18억원 사용(임오경) ○ 유인촌 장관, 가수 김윤아 후쿠시마 발언에 ‘공인으로 신중해야 발언’의 문제(임오경) ○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과당 책자 관련, 홍보 책자 자체가 과당 수준(유정주) - 삼중수소 비교 대상을 커피 등에 비유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거리 제공 - 사고원전의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 대량 방출은 최초 ○ KTV(한국정책방송원)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편파 방송(임오경) - 국민세금 운영 KTV, 최소 1100만원 예산 들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하다는 프로그램 제작 방영 ○ 해양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낙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문화재청 보호 대책 전무(유정주) 	유정주
농해수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본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 지적, 활어차 해수 방사능 검사 여부 및 해수 처리 법제 강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 촉구(윤재갑) ○ 일본산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지역 표기 없어 확인 불가 (윤재갑, 안호영) ○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일본산 수산물 30% 이상 증가로 국민 신뢰 불신 등 지적(신정훈) ○ 일본 수산물 수입 증명서에 수확지, 가공제조된 곳 표기하게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수산물가공품 수입 금지 가능 강조(위성곤) ○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방사능 검출 위험성 강조(윤준병) ○ 런던협약 총회의 해수부 대응 질타(여기구) ○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 비공개 문제 제기(위성곤) ○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21년 해수부 수석대표 발언과 이번 23년 해수 	윤재갑

	<p>부 수석대표 발언 차이 심각(김승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수 방류 관련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는 윤 정부의 말은 허위 주장(이원택) ○ 23년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 감소 및 생산자 피해 등 미래 수산업 어려울 것이라 강조(서삼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지지가 어업인 79.8%, 일반국민 72.5% 조사 결과로 나옴 ○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예산 확대, 장비 구입 확대 필요, 촘촘한 사전 안전검사와 실시간 공개, 강조(주철현, 소병훈) ○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수협중앙회의 역할 전무 질타(윤재갑, 위성곤, 주철연, 김승남) ○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쿠시마 인근 해역 조사 한 건도 없어 우려, 당초 해양조사 계획 수립 전무 지적(이원택) ○ 해양수산개발원 주관 경사연 오염수 배출 대책 보고서 관련 해수부 장관에 보고 되지 않음. 고의적 은폐 의심(신정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고서 중요내용 :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등 사법적 대응 방안 마련 권고 	
정무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조실 오염수 일일브리핑 80회 가깝게 일본측 표현 반복, 위험 상황 발생 시 매뉴얼, 프로세스 준비 대책 질의(강훈식) ○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, 가공 수산물 국내 수입 판매 가능한 현 규제 정책의 허점 보완 요구(오기형) ○ 일본 소문피해 지원액 800억엔 편성, 그러나 한국 측은 피해보상 대책 전무, 구상권 등 대책 마련 필요(윤영덕) ○ 에다노 유키 전 관방장관 인터뷰,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위기관리 방안 마련 촉구(민병덕) 	민병덕
보건복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이 발주한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문제(강선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고서 중요내용 : 저선량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없어 오염수 투기로 인해 방사선 피폭선량현저히 늘어날 것, 국민건강영향평가 전향적 조사 필요성 언급 ○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냉동방어 등 가공식품은 사실상 수산물임에도 관리안돼(김영주) ○ 삼중수소 측정 시험법을 개발해 놓고도 안쓰는 식약처 행태 지적(신현영) ○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간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중단(남인순) ○ 식약처의 대응은 국제소송에서 불리한 결과 도출(서영석) ○ 일본 활어차량의 적재된 바닷물 부산향 투기 문제 지적(서영석 의원) 	김원이
과기정통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분석 신뢰도 확인을 위해 선정한 제3자 분석기관 의 신뢰성 의문(허숙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 대상으로 정했던 핵종 64종 중에서 주화연(후쿠시마 오염수 핵종 검사기관)은 4종의 핵종 분석 역량에 대한 국제표준인증만 보유 ○ 국내 판매 급증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 문제 (민형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당 대표가 수산물 시장에서 사용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음식물 내 세슘이나 요오드 측정이 안되며, 국내 인증제도가 없음 지적 ○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 매뉴얼 부실 문제(박완주, 박찬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 시 검사에 대한 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행동대응 사항은 없음 ○ ALPS 등 원전 설비 고장 사례 축소 보고(이정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년간 매년 약 20건, 총 200건 이상의 고장·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원안위는 지금까지 ALPS 주요 고장사례 8건만 공개 ○ 비상임위원(김호철)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 상정 요구 묵살 지적(이정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분석 보고서 역시 원안위 위원 논의없었음 	이정문